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582호
2016. 10. 24

정책동향

-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확대 의미
- 신용평가시장의 선진화 방안과 대응 과제

시장동향

- 주택 재고(在庫) 1,600만호 시대 도래

산업정보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건설산업 동향
- 1조원 이상 대형 해외사업 리스크 증가, 선제적 대응 절실

건설논단

- 해외건설 수주, 글로벌 경쟁력이 문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확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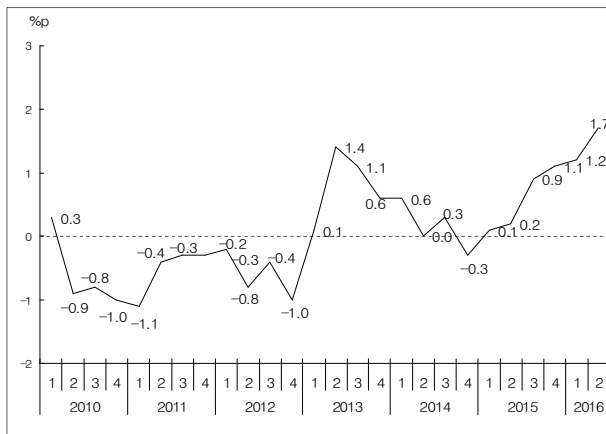
- 건설투자 부진 시 국내 경제 성장률 1%대로 추락 -

■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및 기여율 큰 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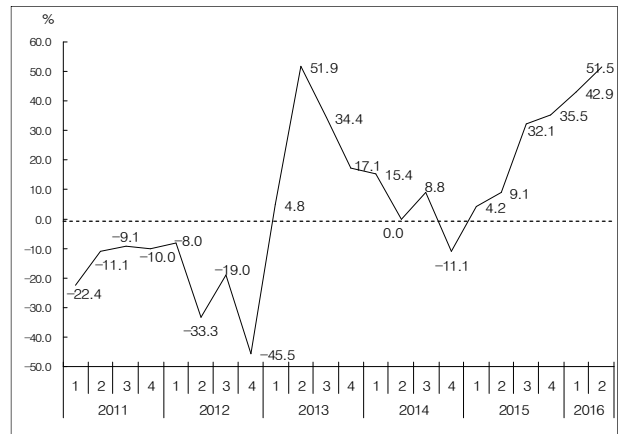
- 최근 건설투자의 국내 경제 성장 기여도 및 기여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제기됨(<그림 1> 참조).
-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올해 1/4분기에 1.2%p, 2/4분기에 1.7%p를 기록해 상승세를 보였고,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 역시 1/4분기에 42.9%, 2/4분기에 51.5%를 기록함.

<그림 1>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및 기여율 추이

경제 성장 기여도 추이



경제 성장 기여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과거에도 국내 경제가 불황국면으로 진입 시 건설투자 경제 성장 기여도 확대 경험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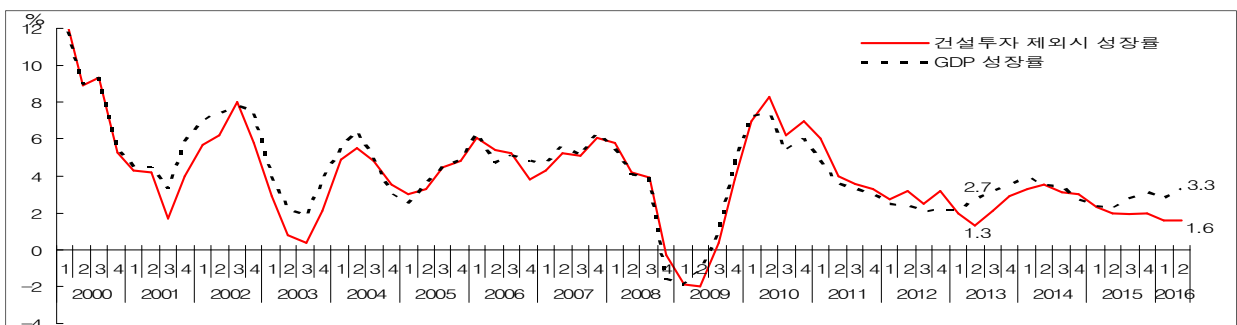
- 그러나,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 및 기여도를 과거 추이와 비교해 볼 때 과거 추이를 벗어나 비정상적 수준으로 상승한 것은 아님.
- 지난 20년간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 50% 상회 8회 : 2013년 2/4분기(51.9%), 2009년 3/4분기(55.6%), 2008년 4/4분기(81.3%), 그리고 2003년 2/4~3/4분기(63.6%, 77.8%) 등
- 연간 기준으로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1998년 51.2%, 2003년 47.7%, 2009년 84.8%를 기록해 과거에도 거시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 경우 여러 차례 50%를 상회한 경험이 있음.
-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역시 이미 2001~2003년 사이 대부분 1.0~1.8%p를 기록함.

- 다만,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직후에는 국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공 건설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거시경제 침체를 완충한 반면, 최근에는 민간 주택투자 호조세가 거시경제 침체를 완충하고 있는 특징이 차이점임.
- 2013년 1/4분기부터 2016년 2/4분기까지 3년 6개월 간 주택투자의 기여율 평균이 20.9%로 국내 경제성장의 20%를 주택투자에 의존했는데, 이는 다소 과도한 수준임.
- 반면, 토목투자는 6년 연속 감소해 투자액이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침체가 심화됨.

■ 건설투자 부진 시 경제 성장을 1%대로 추락, 건설을 경제의 버팀목으로 활용해야

-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크게 확대된 것은 건설투자가 호황 국면에 접어든 반면, 타 부문의 경기가 불황 국면을 지속했기 때문임(<그림 2> 참조).
- 산업생산 측면 : 전통적으로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제조업이 최근 부진하면서 경제 성장 기여율이 15년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 확대에 영향
- 지출 측면 : 최근 수출과 설비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
- 따라서 최근의 건설투자 호조세를 국내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버팀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제외 시 올 2/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1.6%에 불과하며, 건설투자 호조세가 없었을 경우 올해 국내 경제는 1%대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건설투자 호조세는 2018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건설투자가 저성장 고착화의 위험에 빠진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단기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 6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해 21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토목투자의 침체 문제 해결이 절실함.

<그림 2> 건설투자 경제 성장 기여도 제외 시 국내 경제성장률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신용평가시장의 선진화 방안과 대응 과제

- 신용평가 신뢰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신용등급 관리 계획 필요 -

■ 금융위원회, 신용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한 네 가지 개선 방향 제시

- 2016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방안으로 시장 규율 및 감독 강화, 독립성 제고, 이해 상충 방지 장치 강화, 부실 평가 검사·제재 실효성 확보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함(<표 1> 참조).
- 2013년 동양사태 이후 관련 제도 개편과 신용평가사의 엄정한 등급 산정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여전히 기업에 대한 사전적, 적시 경보를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함.

<표 1> 신용평가시장 개편 방안

| 방향 | 내용 |
|------------------------|--|
|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 규율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 비교공시 확대 - 신용평가사 역량평가 실시 - 자체신용도(독자 신용등급) 제도 도입 - 신용평가사 자율 감독 기능 강화 |
| 신용평가사의 발행사에 대한 독립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 의뢰 평가 허용 - 신용평가사 선정 신청제 실시 - 펀드 신용평가 도입 |
| 신용평가 이해 상충 방지 장치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사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강화 - 신용평가사 임직원대주주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마련 |
| 부실 평가에 대한 검사·제재 실효성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사 상시 감독체계 구축 - 인가취소영업정지 등 기관제재 실효성 제고 - 부실 평가에 대한 신용평가사 손해배상 책임 부과 |

자료 : 금융위원회 2016. 9. 22. 보도자료

- 시장에서 신용평가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자체 신용도(독자 신용등급) 제도가 도입됨.
- 자체 신용도(stand-alone rating)란 모(母)기업·계열사 등 지원 가능성을 제외한 개별 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의미함. 기업의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과정 중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개념이나, 현재는 신용평가사에 기술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용평가 도출 과정의 논리와 근거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였음.
- 이에 모기업·계열사 등 지원 가능성이 있는 민간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 신용평가

시, 계열사 등의 지원 가능성에 따른 세부등급 조정 여부와 크기를 신용평가사 본문에 서술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체 신용도를 공개하도록 함.

- 신용평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계열사 등의 지원 가능성이 배제된 상황에서의 기업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투자위험 분석이 가능해짐.

● 신용평가 시 발행사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자 의뢰 평가 방식 및 신용평가사 선정 신청제를 도입함.

- 발행기업의 의뢰 없이도 투자자·구독자 등 제3자의 요청 및 비용부담에 의해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객관적이고 적시성 있는 평가가 제공될 수 있으며, 시장에 다양한 등급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신용평가사간 등급 적정성에 대한 상호 감시가 가능해짐.
- 발행사가 신용평가사를 선정하지 않고 제3의 공적기관이 신용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이 “등급쇼핑”¹⁾ 등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한 의혹 없이 당당하게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여 2017년 본격 시행을 추진할 계획임.

-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감독원 시행세칙과 금융투자협회 규정은 연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자본시장법』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금융회사 자체신용도 공개, 펀드 신용평가 등은 관계기간과 협의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임.

■ 변화하는 신용평가시장에 대응하여 기업의 신용등급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신용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됨에 따라 기업의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임.

● 자체 신용도 제도 도입에 따라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자체 신용도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됨.

-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 자체 신용도 제도 도입으로 인해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에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신호하고,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서 기업의 신용등급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지혜(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1) 등급쇼핑(rating shopping)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용평가회사를 사전에 접촉하여 좋은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용평가회사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함.

주택 재고(在庫) 1,600만 호 시대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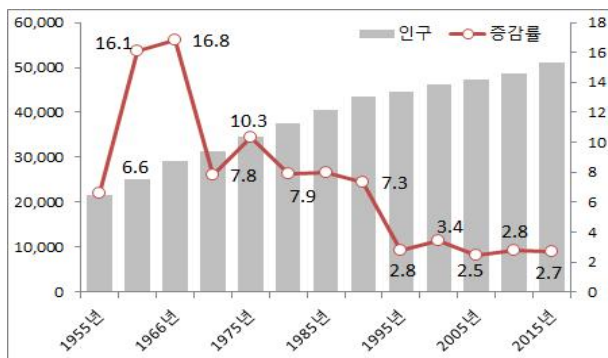
- 향후 주택시장의 과제... 재고주택의 효율적 활용 및 신사업 창출 -

인구 : 성장세 둔화, 노령화 지수 빠르게 상승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은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자료 활용에 유의해야 함.
 - 금번 발표된 전수부문은 행정 자료(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주택공시가격자료 등)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이루어짐.
 - 2005년 이전의 자료는 전통적 현장조사 방식의 집계 자료이고 2015년은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 자료임. 2010년은 시계열적 비교를 위하여 전통적 방식과 등록센서스 방식 모두를 제공함.
- 우리나라 인구는 5,107만 명으로 조사되었고 지난 5년 동안 136만 명이 증가함. 그러나 인구 증가세는 과거에 비해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2005년 대비 2010년 인구 증가율은 2.8%로 조사되었으나, 2010년 대비 2015년은 2.7% 증가하여 증가세가 소폭 둔화됨.
 -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0년 3,551만 명에서 2015년 3,623만 명으로 2.0%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8%에서 72.9%로 0.1%p 증가함.
 -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0년 11.0%에서 2015년 13.2%로 2.2%p 증가함. 그러나 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2010년 68.0p에서 95.1p로 크게 상승함.

<그림 1> 연도별 총조사 인구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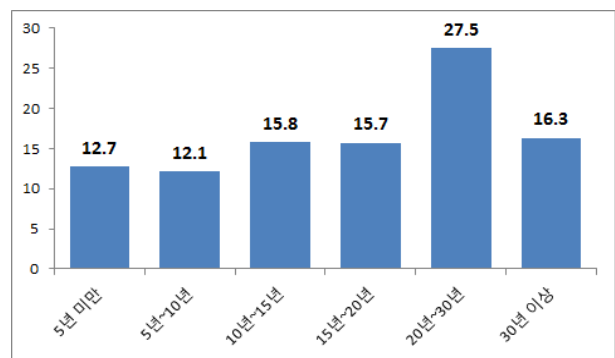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그림 2> 주택 노후 기간별 비중(2015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 가구 : 외국인 가구 늘고, 1인 가구가 가장 흔한 형태로 자리 잡아

- 가구는 1,956만 가구로 지난 5년 동안 160만 가구가 증가하였고, 1인 가구가 가장 흔한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음.
 - 인구 증가세 둔화와 함께 가구 증가세도 둔화됨. 2005년 대비 2010년 가구 증가율은 12.7%에 달했으나, 2010년 대비 2015년 가구 증가율은 8.9%로 둔화됨.
 - 반면, 외국인 가구 증가율은 48.6%에 달함. 외국인 가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6%였으나, 2015년에는 2.2%까지 상승함.
 -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2%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함.

■ 주택 : 재고 1,600만 호 시대 도래, 20년 이상 된 주택 40% 상회

- 주택 재고는 1,637만 호로 지난 5년간 11.0% 증가하였고, 공동주택 비중이 75%에 육박함.
 - 아파트 재고는 981만 호로 1000만 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9% 수준임. 연립·다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비중은 74.5%에 이름.
 - 수도권의 공동주택 비중은 86.2%, 지방은 64.7%로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공동주택 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1990년대 초반 대량 주택 공급기에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가 도래하면서 20년 이상 된 주택의 비중이 43.8%에 이름(<그림 2> 참조).
 -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267만 호이며 20년 이상 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716만 호로 전체 주택의 43.8%에 달함.
 - 2010년에는 20년 이상 된 주택 비중이 31.0% 수준이었으나 2015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5개 신도시 등 1990년대 초반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현상임.
- 재고주택 1,600만 호 시대가 도래하였고 재고주택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음. 주택 유지관리 사업, 임대주택 사업, 주거 서비스 사업 등 재고주택의 효율적 활용 및 신사업 창출이 향후 시장의 핵심 이슈로 판단됨.
 - 1인 가구 및 외국인 가구의 증가 등 수요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나, 공급된 주택은 과거 수요에 기반한다는 측면에서, 질적 측면의 수급 불일치를 메꾸어 나가는 것이 향후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허윤경(연구위원·ykhur@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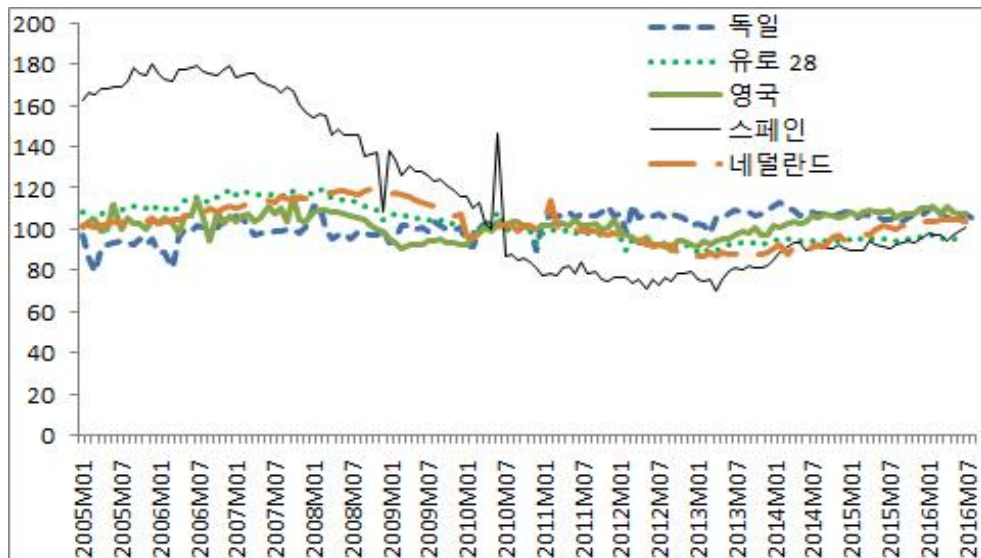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건설산업 동향

- 국제화나 공급체인 확보를 위한 기업 인수 활성화 -

■ 유럽 건설산업은 금융위기가 초래한 침체 상황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유럽 주요국 건설산업은 2013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음. 다만 2016년 7월 기준 EU 28개국의 건설업 생산지수는 2010년 대비 96.7을 기록함. 이는 이탈리아(66.4), 포르투갈(53.4), 헝가리(86.6) 등 일부 국가의 경기 회복 지연을 반영하고 있음.
-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주요국 건설업 생산지수를 보면 독일이 105.6(2016.08), 영국이 107(2016.07), 네덜란드는 103.9(2016.07)등을 기록함(<그림 1> 참조).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 붕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스페인의 건설업 생산지수는 201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2016년 7월에 100을 초과하였음(101.2).

<그림 1> 유럽 주요국 건설업 생산지수(2010=100) 추이²⁾



자료 : Eurostat.

■ 딜로이트(Deloitte)의 유럽 건설업 동향 분석

- 딜로이트는 2016년 3월에 발간된 보고서³⁾에서 2015년 유럽의 건설업 동향을 국제화, 사모

2)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자료는 대부분 Eurostat 추정치거나 잠정치임.

3) Deloitte, "2015-2016: PE firms aim for European construction market", European Construction Monitor, 2016.3.

펀드, 그리고 공급체인 관리의 어려움 등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했음.

- 국제화는 유럽 내 건설기업이 진행한 기업 인수 중 국가 간 혹은 대륙 간 거래 비율 및 해외 시장에서 거둔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분석하였음.
 - 2015년 유럽 내 건설기업의 국제 인수 건수는 71건으로 전체 건설기업 인수의 55%에 해당함. 이는 2012년 27%, 2013년 34.5%, 2014년 49.6% 등 국제 인수 증가 추세와 부합함.
 - 2010~2015년간 유럽 내 건설기업이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 진출하고자 했던 대상 지역은 북미가 전체 96건 중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가 32건으로 뒤를 이었음.
 - 유럽 기업의 아시아 진출 사례의 50%는 영국 기업인데, 식민지 경험 등으로 사회문화적 장벽이 낮은 호주와 인도 지역으로의 진출이었음. 식민지 경험이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스페인 건설기업의 남아메리카 진출이나 프랑스 건설기업의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진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됨.
 - 유럽 상장 건설기업 중 상위 50개사의 해외 수익 비중은 2010년 43%였으나 2015년에는 52%로 상승했음. 다만, 딜로이트는 유럽의 건설업 생산지수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 및 해외 시장이 유럽 내 건설시장과 대체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2016년 해외 시장 비중이 2015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유럽 건설업의 국제화 추세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의 하나가 사모펀드와 사모펀드 운용사에 의한 건설기업 지분 인수 경향임.
 - 2011년 이후 다수의 사모펀드들은 포트폴리오에서 건설업 비중을 늘렸는데, 2012년에는 건설기업 지분 매입 경향을, 2013년에는 인프라 투자사업 지분 투자 경향을 보임. 2015년에는 건설용역 기업이나 전문건설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적으로는 폴란드나 러시아처럼 향후 건설시장 전망이 보다 낙관적인 국가의 건설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유럽의 건설업은 생산 증가의 대가로 공급사슬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장비,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갖춘 전문건설업자나 건설 기능공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2014년과 2015년 영국, 아일랜드,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등에서 공급사슬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는 입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조사됨.
 - 독일의 경우 하도급계약으로는 적절한 협력업체를 확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중견기업들이 엔지니어링회사나 전문건설기업을 인수합병해 수직 계열화하는 현상도 나타났음.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

1조원 이상 대형 해외사업 리스크 증가, 선제적 대응 절실⁴⁾

- 조기경보 기능 확보, 선제적 대응의 시급성 -

■ 해외건설시장 지속적 성장 예상, 하지만 국내 건설기업 수주 실적은 급감

- 글로벌 전망 기관⁵⁾은 ‘2025년 해외건설시장은 약 15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향후 건설 상품 구조는 인프라시설이 약 32%, 에너지를 포함한 플랜트시설은 약 13%, 상업용 건물을 포함한 주거시설이 5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 실적은 2016년 9월 기준 약 1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급감한 실정임. 이의 주요 원인은 시장 환경의 급변과 함께 재정 조달 역량과 같은 발주처의 요구 사항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임.
 - 2013년 이후 국내 건설기업들이 수주 확대보다 수익성 제고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력 강화가 절실한 시점임.

■ 1조원 이상 대형 해외 사업 리스크 증가, 기업의 경영 악화에 직접적 영향 예상

- 최근 수주된 1조원 이상 대형 사업의 공기(Project Duration)가 30~60% 경과하면서 발생된 리스크가 누적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15년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발한 ‘해외사업 잠재 리스크 조기경보체계(Risk-EWS)’에 의하면, 2016년 4분기에는 1조원 이상 사업에 누적된 잠재 리스크 규모가 산업 전체에서 약 57%를 차지할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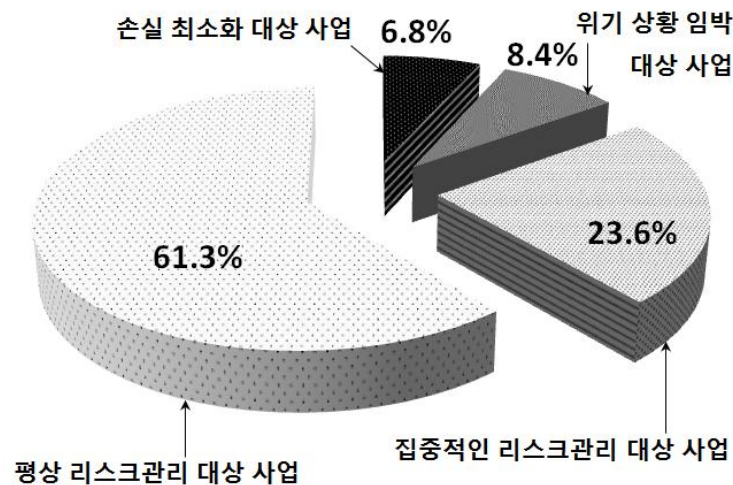
<표 1> 해외 사업 규모별 잠재 리스크가 산업에 미치는 민감도

| 구분 | 2015년 1분기 | 2015년 2분기 | 2015년 3분기 | 2015년 4분기 | 2016년 1분기 | 2016년 2분기 | 2016년 3분기 | 2016년 4분기 |
|-------------------|--------------|--------------|--------------|--------------|--------------|--------------|--------------|--------------|
| 1,000억원 이하 사업 | 0.5% | 0.6% | 0.4% | 0.4% | 0.4% | 0.4% | 0.4% | 0.5% |
| 1,000억~5,000억원 사업 | 26.2% | 23.1% | 21.8% | 21.6% | 20.7% | 18.8% | 19.1% | 18.4% |
| 5,000억~1조원 사업 | 31.6% | 32.4% | 32.1% | 29.2% | 29.4% | 28.1% | 26.7% | 24.4% |
| 1조원 이상 사업 | 41.7% | 44.0% | 45.7% | 48.8% | 49.5% | 52.7% | 53.9% | 56.7% |

4)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발한 해외사업 잠재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Risk-EWS)을 활용한 결과를 요약한 것임.

5)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14.

<그림 1> 집중적인 리스크관리 및 위기관리가 요구되는 사업 비중



주 : '손실 최소화 대상 사업'은 계획된 공기(duration)가 지났지만 실적이 80% 미만인 사업, '위기 상황 임박 사업'은 계획된 공기가 지났지만 실적이 80~95%인 사업, '집중적인 리스크관리 대상 사업'은 공기가 50~60%가 지났지만 실적이 30% 미만인 사업을 의미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최근 수주한 프로젝트들은 계약 금액이 대형화되고,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대형 사업 1건의 손실 규모가 기업 전체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그림 1>을 살펴보면, 집중적인 리스크관리 또는 위기관리가 절실한 사업은 수행되고 있는 대형(1조원 이상) 사업 전체 중 약 39%를 차지할 만큼 선제적 대응이 절실함.
- 특히 약 15% 사업은 초기 계획된 사업 기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여 손실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선제적 리스크 대응,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시작

- 사업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단위 사업에 대한 리스크관리 성과는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침. 또한 사업의 공기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 대형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활동이 중요함.
- 해외건설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대형 사업의 선제적 리스크 대응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금석임.
- 나아가 엔지니어링 및 자원조달 역량을 향상시켜 향후 발주처의 요구 사항을 선제적으로 충족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유위성(연구위원 · wsyoo@cerik.re.kr)

해외건설 수주, 글로벌 경쟁력이 문제다

올해 해외건설은 ‘수주절벽’ 시기를 맞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186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수주 실적(347억 달러)보다 54% 줄었다. 일부 대형 건설사는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흔히 지적하듯이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중동의 건설 발주액 축소 탓도 크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의 올해 건설 발주액은 작년(1,650억 달러) 대비 15% 정도(250억 달러) 감소해 1,400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중동 발주액 감소만으로 우리 해외 수주가 반토막 난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우선 2013년에야 실체가 드러난 해외 플랜트업체의 대규모 적자 원인을 보자. 우리 업체 간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보다 ‘수행 능력을 초과한 과잉 수주’가 더 큰 문제였다. 중동 플랜트사업에 편향됐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10년 전인 2006년만 해도 165억 달러였다. 2007년에는 398억 달러로 폭등했고, 2010년에는 716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4~5년 새 4~5배 가량의 폭발적인 수주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주요 해외 플랜트업체들의 수주 잔액도 30억~4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를 넘어섰다. 현장 수도 3~4개에서 15개 내외로 늘었다. 하지만 해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4~5년 새 4~5배 늘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플랜트 사업 인력에 대한 업체 간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졌고, 인건비도 크게 올라갔다.

해외 플랜트사업은 대개 엔지니어링(E)-구매(P)-시공(C)을 함께하는 ‘EPC 사업’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지니어링 역량이다. 하지만 우리 업체들에 가장 부족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엔지니어링 역량이다.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인력과 역량이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수주 물량을 떠안다 보니 후속 작업인 구매와 시공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그 결과 저가 수주 현장만이 아니라 대다수 해외 플랜트 현장이 돌관 작업 현장이 되고 적자 현장이 되다시피 했다.

이 같은 해외건설의 손실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수주 지상주의’ 같은 물량 중심 사고를 탈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해외건설 수주 감소는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수익성 중심으로 선별 수주하고, 기존의 부실 사업을 정리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볼 수도 있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급감한 이유는 정부 지원이나 금융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예컨대 정부 정책에 따라 작년에 조성한 2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해외인프라펀드(KOIF)’는 지난 1년 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결국 지원 부족보다 경쟁력 부족이 해외 수주 급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또다시 해외건설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단편적인 지원 대책의 나열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경제, 2016. 10. 14>

이상호(원장 · shlee@cerik.re.kr)